

전 세계 에너지 전환 지연시키는 한국의 해외 공적금융

이슈 브리프 2024년 4월



과학은 명확하다. 지구 온도 상승폭을 1.5°C로 제한하고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60% 이상은 지하에 남아있어야 한다.¹ 이는 다른 의미로 **신규 석유·가스·석탄 인프라에 대한 모든 투자는 기후 위기의 심화, 혹은 조기 폐쇄될 좌초자산의 규모의 확대,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.** 위험한 투자엔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(CCS) 기술, 화석연료 기반 수소, 그리고 암모니아 혼소(co-firing)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기술들도 포함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**부유한 국가들은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화석연료 확장을 지원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.** 한국은 화석연료 사업 세계 최대의 공공 자금 조달국 중 하나로,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0억 달러를 제공했다.

본 브리핑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적 자금 제공에 초점을 맞춰 **한국의 에너지 관련 공적 자금 제공을 조사하였고,**²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(Oil Change International)의 공공 금융 에너지 데이터베이스([Public Finance for Energy Database](#))의 데이터를 활용했다.

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:

- **한국은 국제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 금융을 지원하는 최대 공여국 중 하나로,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평균 100억 달러를 제공했다.**
 - 2020~2022년 새 G20 국가 중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은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. 캐나다는 2022년 말 청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(CETP) 서명국으로서 [화석연료에 대한 국제 공공 재정을 종료하였기 때문에](#), 한국은 국제 석유·가스 금융 투자 제한 정책이 부재한 국가 중 최대 화석연료 금융 공여국이 되었다.
-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**한국 화석연료 금융의 대부분(84%)은 화석(천연)가스 사업으로 흘러들었으며,** 이외 석유·가스 혼합 사업(8%), 석탄(6%), 석유(2%) 사업이 지원을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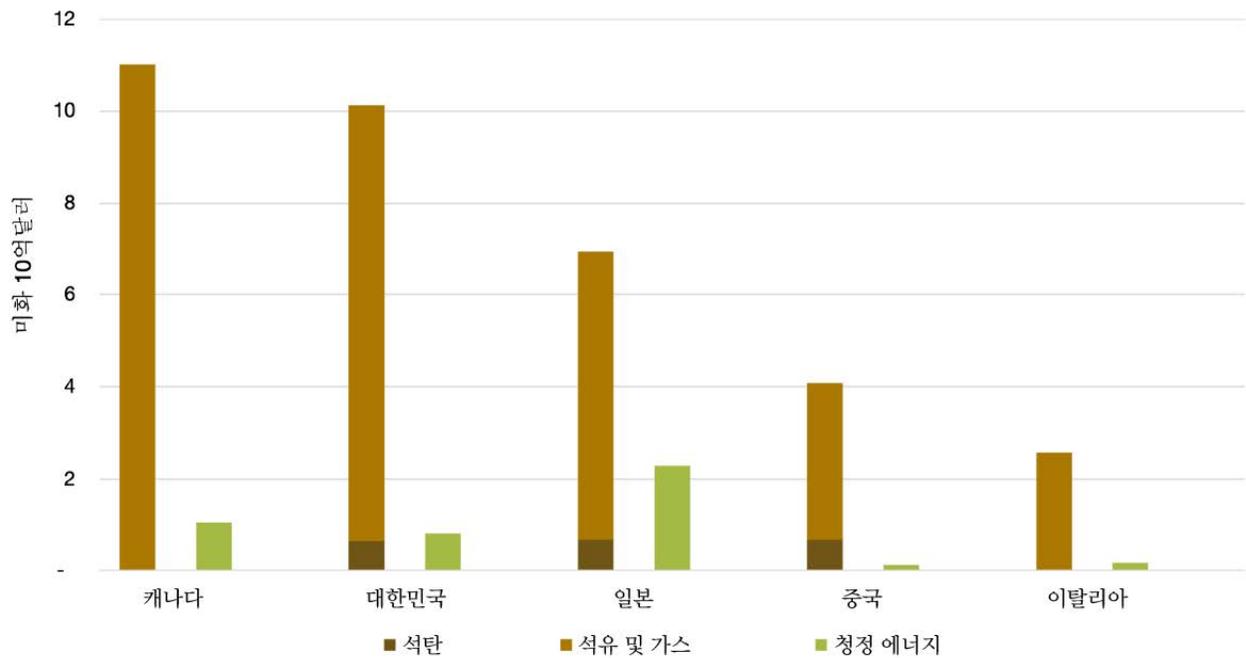
¹ Oil Change International의 2023년 분석에 의하면 1.5°C 목표에 따른 잔여 탄소 예산(50% 확률)은 이산화탄소(CO₂) 380기가톤(Gt)으로, 현재 개발된 석유, 가스 및 석탄의 약 60%가 추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. 최신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의 잔여 1.5°C 탄소 예산은 해당 분석에서 가정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. (e.g., 2024년 초 기준 단 210기가톤(Gt) CO₂). 이 업데이트된 탄소예산은 현재 개발된 매장량의 최대 4분의 3이 지하에 남아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.

Kelly Trout, "Sky's Limit Data Update: Shut Down 60% of Existing Fossil Fuel Extraction to Keep 1.5°C in Reach," Oil Change International, 2023년 8월, <https://priceofoil.org/2023/08/16/skys-limit-data-update-shut-down-60-of-existing-fossil-fuel-extraction-to-keep-1-5c-in-reach>; Trout et al., "Existing fossil fuel extraction would warm the world beyond 1.5 °C."

² 본 이슈브리핑은 한국 수출입은행(Korea EXIM), 한국무역보험공사(K-Sure), 한국산업은행(KDB), 한국정책금융공사(KoFC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의 금융제공을 조사하고 있다. 기관별 정보 공개의 한계를 고려한다면,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는 과소책정되었을 수 있다.

-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화석연료 금융의 72%가 중류부분(midstream) 운송 및 가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, 그 중 대부분은 LNG 선 건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
-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은 효과가 있었으며,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 결정이 없었다. 그러나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한국의 공적금융 지원량은 감소하지 않았다. 이 자금은 청정에너지로 옮겨가는 대신 더 많은 석유와 가스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. 이는 한국의 석탄 배제 정책을 화석연료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.
-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국제 화석연료 금융은 청정에너지 금융³보다 거의 13배 더 많았으며, 청정에너지 금융은 연간 평균 8억 500만 달러에 불과했다. 반면 일본의 청정에너지 금융은 연평균 23억 달러로 상위 5개 화석연료 금융국 중 가장 높았는데, 한국보다도 3배 더 많았다.

그림 1: G20 국가 중 상위 5개 화석연료 공적 금융 제공국의 청정에너지 금융 제공액 비교 (2020-2022년 평균; 단위: 10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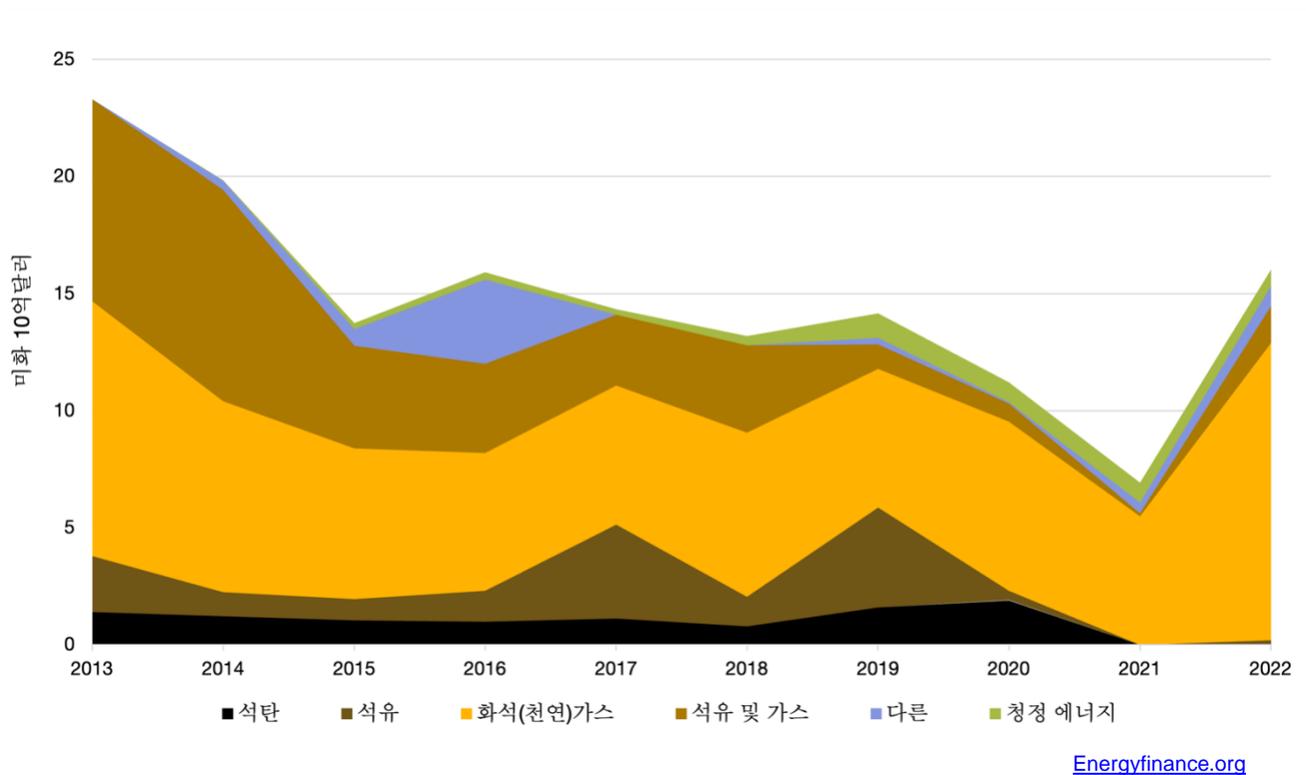
[Energyfinance.org](https://energyfinance.org)

³ 본 브리프에서의 '청정 에너지'는 낮은 탄소 배출량과 더불어 적절한 안전 장치가 갖추어질 때 환경 및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에너지로, 태양광·풍력·조력·지력·소규모 수력 발전을 포함한다.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도 해당 분류에 포함된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(energyfinance.org/#/about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한국의 계속된 대규모 화석연료 금융 지원은 청정에너지로의 정의롭고 공정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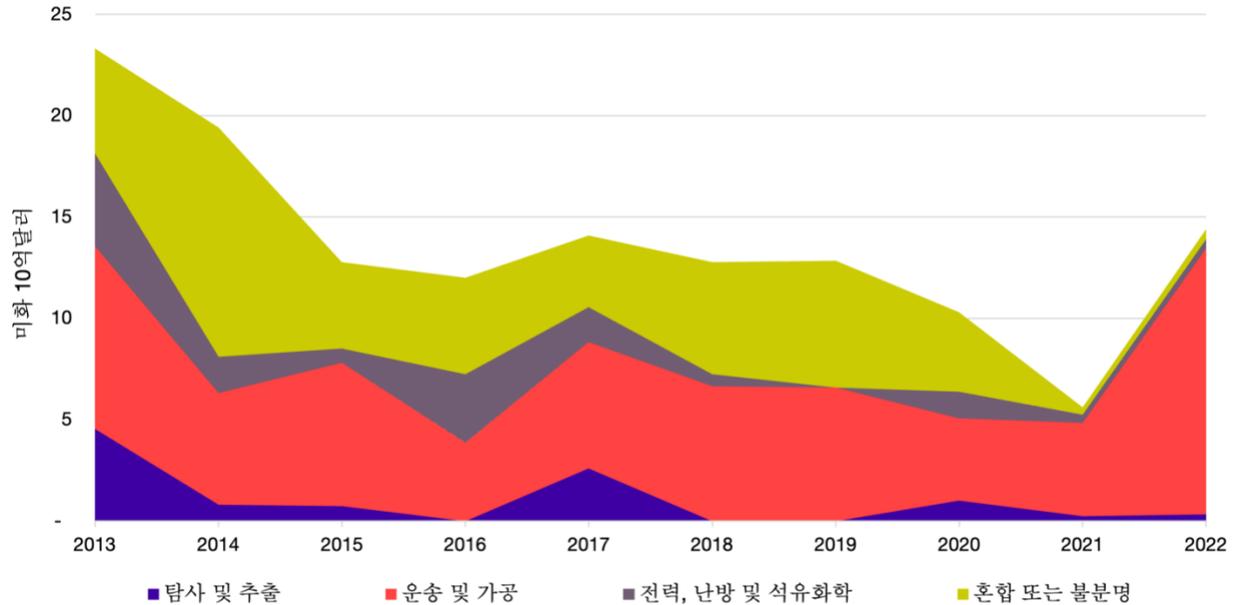
공적 금융은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, 특히 어떠한 종류의 에너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. 공적 금융의 대출, 보조금, 주식 매입 및 보증은 정부가 보증하며 때로는 시장보다 더 낮은 금리와 더 긴 기간 동안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의 위험을 낮춘다. 한국의 공적금융 기관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, 대신 그들은 화석가스의 운송과 처리에 과도한 역할을 맡고 있다 (그림 2, 그림 3). 여기에는 파이프라인, LNG 터미널 및 운반선과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되는데, 이는 석유 및 가스 공급망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기에 민간 부문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가장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다.⁴

그림 2: 에너지 유형별 한국의 연간 국제 공적금융 지원액 (2013-2022 년; 단위: 10 억 달러)



⁴ LNG Carriers: The Floating Pipeline Powering Global Gas Expansion - Unveiling its Hidden Enablers, Solutions for Our Climate, 2023 년 11 월, <https://forourclimate.org/en/sub/data/lng-carrier>; "LNG Finance - will lenders accommodate the changing environment?"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, 2020, p. 20, <https://www.oxfordenergy.org/wpcms/wp-content/uploads/2020/11/Insight-78-LNG-Finance-will-lenders-accommodate-the-changing-environment.pdf>

그림 3: 화석연료 사업 가치사슬 별 한국의 연간 국제 공적금융 지원액 (2013-2022 년; 단위: 10 억 달러)



[Energyfinance.org](https://energyfinance.org)

한국 정부 소유의 공적 금융 기관은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는 민주적이고, 책임 있고,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롭고, 공정한 정책이 시행될 때 가능하다. 지난 2021 년,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화석연료 금융을 제공했던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39 개의 서명국은 2022 년 말까지 저감 수단이 없는(unabated)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 공적 자금 제공을 중단하고는 대신, 공적 자금을 청정 에너지 전환에 우선시할 것을 약속했다. 서명국에는 캐나다, 이탈리아, 독일 및 미국 등이 있다. 일본 또한 2022 년 5 월 G7 정상회담에서 거의 유사한 약속에 동참하며 동료 국가들에 합류했습니다.⁵ 이로 인해 한국은 아직 석유·가스에 대한 국제 공적 금융 제공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주요 후발 주자로 남아 있다.

에너지 관련 공적 자금 투자를 공정하고 1.5°C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경로로 맞추기 위해 한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:

- 청정 에너지전환 파트너십(CETP)에 가입하고 공적금융의 신규 석유, 가스, 석탄 사업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투자를 즉시 중단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. 이 정책에 CCS 사업,

⁵ Nicole Rodel, "Response: G7 ministers pledge to end public finance for fossil fuels by the end of this year, prioritizing clean energy support instead," Oil Change International, 2022 년 5 월 27 일, <https://priceofoil.org/2022/05/27/response-g7-ministers-pledge-to-end-public-finance-for-fossil-fuels-by-the-end-of-this-year-prioritizing-clean-energy-support-instead/>

화석연료 기반 수소, 암모니아 혼소(co-firing), 화석가스 및 기타 ‘위험한 방해 요소(dangerous distractions)’들 같은 기술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.

- 유럽 연합(EU), 영국 및 캐나다⁶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(OECD)에서 제안한 석유 및 가스 금융 제한 제안서들에 동참해야 한다. ⁷ OECD 수출신용협약은 모든 OECD 국가 공적수출신용기관(ECA)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들을 제정한다. 현재 이 규정은 대부분의 석탄 금융 제공을 제한하고 있지만, 한국과 미국은 OECD 수출신용기구들(ECAs)의 석유 및 가스 금융
- 조달을 제한하자는 제안서들에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⁸
- 특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서 청정에너지 금융의 대규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. 이는 변혁적인 에너지 민주주의와 환경 정의를 우선순위로 공정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.
- 투명성과 시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보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.



Photo: Nicholas Doherty

⁶ Kenza Bryan and Alice Hancock, "EU and UK seek to ban on subsidies for foreign fossil fuel projects," Financial Times, 2023 년 10 월 29 일, <https://www.ft.com/content/b4d0e4be-aa81-4345-a004-b76cafc5129e>

⁷ Nina Pušić and Claire O'Manique, *Changing the Trade Winds: Aligning OECD Export finance for energy with climate goals*, Oil Change International, 2023 년 5 월, <https://priceofoil.org/2023/05/23/changing-the-trade-winds-aligning-oecd-export-finance-for-energy-with-climate-goals/>

⁸ Kenza Bryan, Aime Williams and Alice Hancock, "US and EU differ over the future of fossil fuel subsidies in OECD talks" Financial Times, 2024 년 3 월 26 일, <https://www.ft.com/content/de9fee8b-e369-4603-9054-4cabb20bf349>